

“윤·한, 김여사·총선 이야기 빼고 민생만 논의 했다”

윤대통령·한동훈 위원장 오찬
“당정, 민생 개선에 더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이도은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또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시간 37분간 이어진 오찬과 차담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성 정무수석, 이도은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함께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오찬에서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민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총선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나 김경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와의 오찬에서 참박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원내대표는 전했다. 김 비대위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오찬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당정 관계에 대해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는 형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윤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른바 ‘사천’ 논란과 김 여사 이슈를 놓고 온도 차를 표출해왔다. 지난 21

일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이날 다시 오찬을 함께한 것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어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민주 ‘86’ 겨냥 표적출마 선언 잇따라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류 세력인 ‘86’ 세대를 겨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86이란 1960년대에 태어난 1980년대 학번이면서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거쳐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 대해 영입된 집단을 일컫는 용어다. 당시 이들이 30대 청년이어서 ‘386’ (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으로 불렸는데, 당시 최첨단이던 ‘386 컴퓨터’ 처럼 젊고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려는 작명이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십년간 특권을 누린 이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운동권 심판론’을 4·10 총선 구도로 설정한 가운데 운동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자객 공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총선은 경제·민생을 살리는 실력 있는 혁신 여당을 선택할 것이냐, 낡은 이념에 빠져 운동권 특권과 기득권을 수호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기조에 맞춰 여러 인사들은 민주당 86 정치인들의 ‘뒷발’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속속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에는 이날 태영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영 지역구인 구로갑에는 YTN 앵커 출신 국민 의회 영입 인재인 호준석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다. 이 곳 현역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4선 중진 이인영 의원이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는 여당 내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전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라고 되물으며 윤 전 의원에겐 힘을 실었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선 김민석 의원과 대결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86의 시조 격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 출신이다.

전대협 6기 의장대행 출신인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중랑구에는 이승환 전 중랑구 당협위원장,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의 서울 강북갑에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나설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한 위원장이 ‘개말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지목한 정정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는 각각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열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마포를 공천과 관련해 ‘사천(私權)’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자객 공천이 예상되는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국힘, 총선 공천 접수 시작 ... 수도권부터 후보 확정

전국 253개 지역구 2월 3일까지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서 제출해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에서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명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게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가급적 빨리 후보를 확정해 야당 후보와 경쟁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관위는 먼저 단수 추천 지역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 ▲경선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입 인재 중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번 주 안에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방 후보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후보들을 내서 비례대표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공

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적극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 ‘컷오프’ (공천배제) 대상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할지 묻자 “그때 봐서 하겠다. 컷오프된 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내 집 주차장 갖기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보조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 2. 28.

지원금액 개인주택: 설치유형에 따라 평균 1~4백만원, 최대 4,379천원
공동주택: 주차장 1면당 최대 100만원, 단지당 최대 5,000만원

문의 및 신청: 062-960-3937 (광산구 교통지도과)